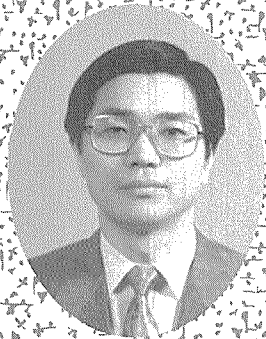


유전개발 중장기 정책 연구



李 福 載

에너지경제 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장

이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95년도 출연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연구결과발표회(7.20)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췌 또는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註〉

1. 개발원유의 도입목표

중동지역에서의 정치적인 불안과 국제 석유시장의 공급구조 취약화에 직면하여 석유공급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석유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전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양의 개발원유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소한 필요로 하는 개발원유의 도입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이다. 물론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석유소요량 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에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석유의 소비

부분 (가정부문, 상업부문, 수송부문, 산업부문, 공공 기타) 중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석유공급의 안정성을 책임져야 할 부문이 어느 부문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소비부문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석유공급이 감축되었을 경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 어느 부문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연료전환능력이 미약할 수록, 석유소비감축(또는 절약) 능력이 적을 수록, 그리고 석유제품의 저장능력이 적을 수록 그 피해는 커지게 된다. 즉 석유공급 감축에 대한 자신의 방어능력이 미약할 수록 그 피해의 심각성은 더욱 증대된다. 현실적으로 국내의 모든 소비부문이 이러한 능력이 미약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그 능력이 미약한 소비부문은 가정부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 가정부문에 대한 석유공급의 안정성을 책임져야 한다.

국내의 총 석유소비량 중에서 가정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에는 11.8%, 1992년에는 13%수준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인하여 가정부문에서의 석유의 소비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0%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개발원유 도입목표는 10%(이상)로 설정함이 타당하다.

2. 유전개발사업의 성공요인

가. 유전개발사업의 특징

(1) 유전개발사업의 위험요인

유전개발사업에 따른 위험은 지질학적인 위험, 경제적인 위험, 정치적인 위험의 세가지로 대별된다. 이 세가지 위험은 유전개발사업이 진척됨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상이한 패턴을 보이게 된다. 즉 지질학적인 위험은 탐사단계에서 가장 높으며, 개발 및 생산 단계로 이행하면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반하여, 정치적인 위험은 탐사단계에서는 낮지만 개발 및 생산단계로 이행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경제적인 위험은 탐사·개발·생산의 전단계에 걸쳐서, 시장여건의 변동과 함께, 그 영향력이 변화하게 된다.

지질학적인 위험은 탐사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서 저류암의 위치와 물리적인 제반조건 그리고 석유매장량의 크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것이다. 이들 세 요인이 상업적으로 개발가능한 매장량(RESERVE)의 크기와 생산·판매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최종수익(REWARD) 또는 손실을 결정하는 중요한 물리적인 조건들이다. 그 초래되는 불확실성은 근원암과 저류암 및 주변 지층의 조건 그리고 원유의 이동현상에 기인한다.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탐사자료를 축적하고 탐사지역을 넓히며 탐사지역이 기존의 개발지역에 인접해 있을 필요가 있다.

지질학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동시에 원유를 개발·생산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수행되는 탐사활동과 다른 일반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활동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후자가 상품의 생산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반하여 전자의 원유 생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후자는 사업의 초기에 투자의 위험을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반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탐사활동의 초기에 위험을 예측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후 현금 유입까지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5년이내인데 반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매우 길어서 6~7년이 소요된다. 더욱 중요한 차이점은 후자의 경우 상품의 제조시설을 건설할 때에 그 장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유전의 위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자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위험은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변 여건의 예기치 않은 변화, 원유 또는 석유제품가격의 변동, 그리고 개발·생산비용의 예기치 않은 과도한 부담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유전개발사업의 주변여건 중 중요한 것은 자원보유국의 유전개발과 관련한 제도(특히 관련세제 및 생산물분배 관련 제도)가 외국 석유개발회사에게 어느 정도의 유인(INCENTIVE)을 제시하는가이며 이 유인제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가하는 점도 중요한 고려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여건으로서 그 자원보유국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전의 개발과 생산 관련한 제반 지원시설(INFRASTRUCTURE)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도 점검해볼 중요한 여건이다.

개발 및 생산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사전적인 계획과 면밀한 작업일정 그리고 각 작업단계별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불충분한 데에 기인한다. 또한 현지의 유전개발 관련 규제제도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사전 준비의 미흡도 과도한 비용부담의 원인이 된다. 해당 자원보유국 내에 유전개발과 관련한 제반 지원시설이 충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인 위험을 구성하는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서 OPEC회 원국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생산량 할당(QUOTA) 등의 규제로 인하여 원유의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품질규격(예:유황함량, 비중)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원유를 생산할 경우 판매시장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개발대상이 되는 유전에 인접해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용이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전개발사업의 경제성이 악화된다. 현지 정부의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환경보호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중요한 고려점이다.

정치적인 위험은 자원보유국의 정치적인 불안정과 자원보유국 정부와 외국석유개발회사간의 갈등에 주로 기인한다. 자원보유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은 그 발생시의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정치적인 불안정이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보다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원보유국 정부와 석유개발회사간의 갈등은 이 회사가 탐사 및 개발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 결과 당해 유전개발사업의 경제성이 입증된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석유개발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유전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되고 그 유전개발사

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명되면 산유국 정부는 사업초기에 외국 회사들에게 제시했던 유리한 조건들을 수정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때 수정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조건으로서 외국회사의 이익에 대한 세금징수, 탐사지역과 생산가능지역에 대한 제한, 원유 판매가격에 대한 규제, 원유의 생산량에 대한 규제,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자국내에서 조달되는 제반 투입요소(원재료, 기자재, 노동력 등)에 대한 구입 의무량과 구입가격에 관한 규제가 있다

자원보유국 정부와 외국 석유개발회사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분야는 유전개발 사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배분과 관련된 사항, 원유의 생산량과 판매가격 등 총 판매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외국 석유개발회사의 유전개발 활동이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세가지 부문으로 대별된다.

이 세가지 위험중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위험은 지질학적인 위험이다. 즉 탐사사업의 성공을 저해가 해의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질학적인 위험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유전탐사사업의 경제적인 주요 특징

유전탐사사업은 투자사업이다. 탐사사업이 회사의 단순한 수명연장(SURVIVAL)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탐사사업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으며 회사의 한정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투자사업과 경쟁해야 하는 하나의 투자사업이다.

유전탐사는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매장량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 알려져 있으나, 개발되지 않는 광상(DEPOSIT)의 개발, 기존 유정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사업, 생산중인 유전의 매입등이 있다. 탐사사업은 이러한 다른 사업에 비하여 투자회임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으나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유전탐사사업은 여러개의 사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PORTFOLIO이다. 즉 미지의 광상에 대한 탐사, 알려져 있는 광상에 대한 탐사, 기존의 유정에서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서의 탐사활동이 수행될 수 있으며, 이들 각 단계에 있어서 매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사업들로 구성되는 PORTFOLIO는 회사의 목적과 비교우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하게 된다.

나. 유전개발사업의 성공조건

분명한 사업목표와 확고한 추진전략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은 투자회임기간이 장기간인 탐사사업에 있어 특히 요구되는 것이며 더우기 최고 경영층이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탐사사업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관성과 추진력을 상실하게 된다. 유전개발사업의 추진은 PORTFOLIO전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탐사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명한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을 가지고 탐사대상 광물(석유)과 대상지역을 집중시킴으로써 유전개발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는 유전개발사업을 위한 강력한 추진주체가 절실히 요구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전탐사사업 시간단위의 장기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요구된다. 유전탐사사업은 연구개발(R&D)사업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그 수익이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점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탐사사업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10년~15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몇개의 기간으로 세분화 하여 세분화된 각 기간에 대하여 사업의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의 확립이 요망된다. 이러한 사업의 정기적인 중간평가는 탐사사업의 오류를 적기에 시정하는데 긴요한 것이다.

신규지역(FRONTIER)에 대한 탐사활동과 기초단계의 탐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회임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기초 탐사활동에 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예산은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즉 기초 탐사활동에 대한 예산은 매년 총 매출액 또는 총 지출비용의 일정 비율로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아가고 보다 진척된 단계에서의 탐사활동이나 매입을 위한 예산은 매년 사업수에 따라서 변동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R&D의 특성을 지닌 기초탐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고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유전개발사업이 회사내의 특정부서의 사업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차원에서 그 회사의 발전(성패 또는 존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회사내의 일개 부서의 사업으로 유전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유전개발사업의 성공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중 하나가 될 뿐이며, 이는 유전개발사업의 시간단위가 장기적인 동시에 그 수익성이 매우 불확실한 점을 고려할 때 유전개발사업을 지속적

으로 강력히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해외 유전개발 사업

3. 유전개발사업 추진상의 주요 문제점

가. 국내 유전개발 사업

국내 유전개발 특히 대륙붕 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미흡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미흡은 1970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인식부족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미흡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업이 지니는 구조적인 특성인 투자회입 기간의 장기성과 낮은 성공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사업주체 특히 정책당국(예산당국)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부족은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대륙붕에 대한 탐사사업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곤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결과 국내 대륙붕에 대한 기초 탐사자료가 미흡하게 되고 이는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제도상의 문제도 발견된다. 특히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원유의 생산규모와는 무관하게 생산량의 12.5%를 조광료로 정부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형의 유전에 대하여 초기 비용이 과다하도록 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다.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을 장기간(8년~1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국내외의 자본과 기술을 유인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접국과의 대륙붕 경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장애요인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부지역에 대하여는 한·일 공동 대륙붕개발협정에 의거하여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6-1광구의 북부 동해지역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4광구에 대하여 경계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이 동일 대륙붕이고 중국과 북한이 중간선 경계원칙을 채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4광구에 대하여도 중간선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가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주요문제점으로서, 우선 해외 유전개발사업 특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해외 유전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는 현재 관찰되는 국제 석유시장의 안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석유시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불안하다. 해외 유전개발 사업의 장기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한 것도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Portfolio* 전략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는 주로 탐사사업위주로 지분참여방식의 형태를 취하여 왔다. 이처럼 단순화된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서 유전개발사업의 단계별로 다양화하고 사업추진 형태도 다양화하여 적절한 *Mix*를 구성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

집중화 전략이 미흡하다. 특히 한 사업체가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지역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가는 전략인 사업추진이 미흡하다. 이에 더하여 유전개발 사업의 각 분야별 고도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해외 유전개발시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체계가 미약하고 소요자금의 확보수준이 미흡한 것도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활동계약에 제약이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즉 한국 석유개발공사는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부문과 공동으로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석유개발공사 단독으로는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용자심의를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다. 즉 용자심의를 매 비용지출승인(AFE)시 마다 행함으로써 상당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4. 유전개발사업의 중·장기적인 추진전략

가.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정부 내지 국영기업(한국석유개발공사)은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단독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독으로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참여유인 부족한 사업, 예를 들어서 기초 탐사사업이나 *Frontier* 지역 또는 북방지역에서의 유전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해 나아감에 따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 유전개발과 관련된 신 기술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하여 민간부문에 제공하는 것도 정부부문이 담당해야 할 기능이다.

정부는 유전개발과 관련된 고급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업계에 제공하는 기능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의 주요 내용으로서 주요 자원보유국의 지질학적 자료, 유전개발 관련 정책 및 제도, 그들 국가의 정치 및 경제상황이 있다.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현지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전개발 관련 고급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도 정부가 담당해야 할 기능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유전개발 관련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문인력은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는 물론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행해야 할 많은 국제 계약업무와 해당 국가의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다.

민간부문은 유전개발사업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및 생산광구위주를 위주로 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부문은 또한 생산관련 기술, 회수를 증진기술의 도입 또는 자체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부문과 협력 관계에 있어야하며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안된다.

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규모 유전개발회사 설립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규모 유전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완전한 민간회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 기업별 비교우위의 사업분야를 통합하여 강력한 유전개발사업의 추진주체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대규모 유전개발회사는 위험부담능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자금조달능력을 현격히 강화시키는 동시에 원유의 실제적인 수요자인 정유회사의 참여로 인하여 개발원유에 대한 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대형 유전개발 전문회사의 설립은 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사업추진 주체를 확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회사의 운영에 정부의 관여 폭을 가능한 한 축소시키고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PORTFOLIO 전략에 의한 사업추진

탐사사업과 기개발 유전의 매입간에 투자재원의 적절한 배분이 요망되며, 탐사사업내에서도 기초 탐사사업과 개발유전내에서의 심층적인 탐사사업 그리고 회수율의 증진을 위한 사업간에 투자재원의 적절한 배분이 요구된다. 또한 전통적인 유전개발사업과 초중질유의 개발사업간의 균형적인 추진도 요망된다. 초중질유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예로서 Canada Alberta주의 Oil Sand 개발사업과 Venezuela Orinoco 중질유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라. 집중화 전략 요망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전개발사업을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요 전략지역(예: 동남아시아, 북방지역, 중남미, 중동)에 대한 집중적인 진출이 요망된다. 특정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이고도 집중적인 탐사 및 개발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탐사 및 개발자료를 축적해 나아갈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유전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마. 제도적인 개선

유전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요자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하여 예특회계에서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국내 대륙붕에 대한 탐사 및 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시켜 나아가는 동시에 고급의 지질학적(지구 물리학적, 지화학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인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이는 국내의 유전개발사업 주체로 하여금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에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다.

현행 조광권제도의 개선도 요망된다. 원유의 생산량과 조광료를 긴밀히 연계시키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비의 회수기간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생산물 분배제도(PSC, production sharing

contract)를 적절히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대륙붕개발사업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전개발사업의 투자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요구되며 유전개발사업 참여회사로 하여금 유전개발 관련 시설의 설계 및 건설사업 그리고 관련 기자재의 납품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

인접국과의 광구 경계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하나의 유전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소위 *One Project-One Company*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필요 또한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개선조치로서 용자심의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즉 현재의 매 지출승인(AFE)시마다 용자심의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단위별, 회계년도별로 심의하는 체제로의 개선이 요망된다. 이 경우 사후 심의 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성공불용자제도는 해외 유전개발사업이 유치단계에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전개발사업이 성숙단계로 접어들게 되어 민간부문이 이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면 성공불용자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일환으로서 채무보증제도의 도입이 있다.

그러나 채무보증제도의 도입을 유전개발사업이 성숙단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가능한 조속히 도입하여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성공불용자제도)와 함께 자금조달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Project Financing*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One Project-One Company*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 일본 석유 산업 ○

내년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앞두고 주유소·원매회사 지원대책 추진

일본정부는 석유산업 자유화에 대비하여 주유소 및 석유원매회사의 경영효율화를 금융·세제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통산성은 우선 편의점 병설등의 사업다각화나 轉業하는 주유소의 차입금리가 公的 금융기관의 기준금리(현행 年 3.25%)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종업원 해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유소 퇴직공제액을 경감하고 종업원 퇴직금 지불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석유원매회사에 대해서는 대형 유조차의 도입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조세경감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책은 '96년부터 시행되는 휘발유 수입자유화로 석유유통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산성은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주유소에 대한 이자지원제도는 사단법인 전국석유협회를 통해 실시하게 되는데 석탄·석유 및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특별회계(石持會計)에서 이 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 협회는 회원 주유소의 민간은행이나 公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편의점 병설 등 사업다각화를 하는 경우나 주유소를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 운전자금이나 설비자금을 대준다.

통산성은 公的 금융기관의 기준금리인 年3.25%까지 용자액은 운전자금 3천만~4천만円, 설비자금 7천만~8천만円을 상한으로 하여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대장성과 협의중이다. 기간은 최장 15년을 검토중이다.

원매회사에 대한 투자 減稅는 24kl 이상의 대형유조차의 활용이나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의 도입, 공동주유소의 설치 등 휘발유유통의 효율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투자를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투자촉진세제(에너지 革稅制)」의 적용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며 이 세제대상으로 인정되면 설비 취득 첫해에 취득가액의 30%의 특별상각 7%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일본은 내년 3월말부터 특정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特石法)이 폐지됨에 따라 일정 비축시설을 갖출 경우 휘발유등 석유제품 수입이 자유화된다. 또 興業種의 신규참여가 가능해짐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원매회사와 원매 계열의 주유소의 물류합리화에 의한 경영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